

2017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

2017년 4월 26일(수) 낮3시
가톨릭청년회관 5층 니콜라오홀

공동주최 : 가극단 미래, 강원민예총, 경남민예총, 게임인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광주민예총,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전남작가회의, 극단 고래, 극단 각시놀이, 극단 신세계,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뜨거운청춘,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산업 사드피해 공동대책회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모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대한가수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한국독립PD협회), 문화연대, 문화활동가대회 준비모임, 뮤지션유니온, 민족미술인협회,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부산민예총, 부산영화협동조합,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블랙타파),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살판, 서울민예총,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세종민예총, 아시아1인극협회, 어린이책작가연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예술인소셜유니온, 예술행동단 맞장, 예술NGO-자유공공실천, 울산민예총, 인천민예총, 일상예술창작센터, 자바르떼,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풍물인연석회의, 전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제주민예총, 지역문화네트워크, 청년예술가네트워크, 충북민예총,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총협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목 차

❶ 문화예술단체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언 및 경과 공유

/ 송경동 (시인,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 3

❷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및 공약 발표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위원) ----- 17

김혜준 (안철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문화정책 담당자) ----- 29

구자호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비대위원장) ----- 41

❸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을 위한 문화예술인(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배인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 49

**① 문화예술단체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언 및 경과 공유**

문화예술단체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 _ 단 하나의 약속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을 요구한다!

2017. 04. 26.

가극단 미래, 강원민예총, 경남민예총, 게임인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광주민예총,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전남작가회의, 극단 고래, 극단 각시놀이, 극단 신세계,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뜨거운청춘,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산업 사드피해 공동대책회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연예제작사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모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사협회,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대한가수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한국독립PD협회), 문화연대, 문화활동가대회 준비모임, 뮤지션유니온, 민족미술인협회,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부산민예총, 부산영화협동조합,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블랙타파),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살판, 서울민예총,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세종민예총, 아시아1인극협회, 어린이책작가연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예술인소셜유니온, 예술행동단 맞짱, 예술NGO-자유공공실천, 울산민예총, 인천민예총, 일상예술창작센터, 자바르떼,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풍물인연석회의, 전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제주민예총, 지역문화네트워크, 청년예술가네트워크, 충북민예총,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총협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흥우주사회적협동조합

“새로운 시대의 봄을 위하여” _ 다음 정부의 문화정책을 제안하며

완연한 봄이다. 자연의 봄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봄이 열렸다. 누군가 시혜처럼 내려 준 것이 아니라 거리와 광장으로 나선 1700여만 명의 주권자들 스스로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일구어 낸 새로운 시대의 봄이기에 훨씬 값지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지난 겨울공화국은 참 춥고도 혹독했다. 태생부터가 국정원 대선부정을 통해 탄생한 불법 정권이었다. 모든 곳에서 민주주의가 내쫓겼다. 합법정당이 강제 해산 당했고,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내몰렸고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되었다. 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강행되고, 문화예술인 1만 명이 불법 사찰과 검열 배제를 당해야 했다. 평범한 이들의 민생과 생존권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각종 서민 복지는 후퇴하고, 재벌들만을 위한 감세와 특혜가 난무했다. 대자본의 이해를 위한 교육, 의료, 철도 등 공공부문 사영화가 강행되었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악이 추진되었다. 개사료값보다 싼 쌀값에 분노한 농민들이 노동자 빈민들과 연대해 민중총궐기로 나서기도 했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 호전적인 대북 정책 속에서 한반도 평화는 위험한 줄타기를 내내 해야 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살인 물대포를 앞세워 모든 저항의 소리를 짓눌러 온 공안탄압 정권이었다. 강정과 밀양과 청도에서, 그리고 수많은 노동과 삶의 현장에서 신음 소리가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다. 이런 ‘헬조선’을 살아내야 하는 대다수 ‘흙수저’들의 절망과 분노로 언제든 엎어질 수밖에 없는 정권이었다.

그 수많은 분노가 지난 겨울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모자 몇몇의 범죄 행위에만 분노해서 나온 게 아니다. 그들로 대표되는 공적 권력의 사유화, 난무하는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정책, 노동자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며 그들만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 그들이 일상적으로 자행해 온 부정과 비리에 맞서서 모두가 일어났다. 거덜나버린 87년 항쟁을 넘어 새로운 한국사회로 나아가자는 역사적 항쟁이었으며, 모든 이들의 절망 속에 1%의 기득권만이 천국인 헬조선을 타파하고 모두가 조금은 더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자는 사회적 항쟁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시대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한 상태다. ‘박근혜 파면과 구속’, 핵심 공범들인 최순실, 김기춘, 조운선 등에 대한 단죄, 그리고 진정한 몸통에 다름 아닌 재벌총수 삼성 이재용에 구속은 소중한 시민혁명의 결실이지만 이 항쟁의 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선에서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 역시 당연한 결실이겠지만, 그것만으로 이 항쟁의 종결의 선언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박근혜표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인권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한다. 1100만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사회여야 하고, 2200만 노동자 가족들과 서민 농민 빈민들의 삶이 존중받고 안정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1% 재벌독점특혜 사회가 폐지되고 모두가 참여해 생산해낸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안녕과 평화, 공존, 그리고 자기 가치 실현을 위해 쓰여지는 평등·생태·문화 사회로 전환해 가야 한다. 사드 배치 철회,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확고한 입장들이 바로 서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즉각 재개정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었던 모든 공작정치, 공안탄압 등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예술·체육계를 넘어 언론과 법조계까지 전 사회 부문에 걸쳐 자행되었던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출범 즉시 정부 차원의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두의 노력들을 통해 다시는 ‘박근혜’와 같은 어떤 불의와 비리, 불공정과 특권과 국가폭력이 들어설 수 없는 한국 사회로 나아갈 때 비로소 촛불항쟁은 최소한의 완결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답해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 행동위원회’를 약 8000여명의 문화예술인들과 300여개 문화단체들의 참여로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4일부터 올해 3월 25일까지 촛불항쟁의 최전선인 광화문 광장에서 다섯 달에 이르는 ‘광화문 캠핑촌’ 농성을 이어오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해 먼 세종시까지 ‘블랙리스트 버스’를 운행하기도 했고, 특검 고소고발, 국정원 고소고발, 국가손배청구, 헌법소원 등을 진행해 오기도 했다. 지금도 모든 문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구시대 적폐를 청산하고 문화예술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와 역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들, 언론들과는 다른 형식이지만 문화예술 역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입법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부문에 다름 아니다. 이 항쟁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문화 예술운동 역시 사회적으로 부과된 자기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화예술인들의 노력과 모든 촛불시민들의 요구에 이제 정치권이 답할 차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둠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광장에서 우리 모두가 불렀던 노래들의 한 구절이다. 구시대의 모든 어둠 그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의 빛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해본다.

문화예술단체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 _ 단 하나의 약속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을 요구한다!

1. 제안 배경

-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현재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은 블랙리스트 사태, 국정 농단과 각종 부패, 전현직 문화체육부 장관의 구속 등으로 파탄이 난 상황
- (2) 박근혜 정부 문화행정의 파탄은 단순한 국정농단 세력만의 문제가 아님. 이는 부패한 정치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패한 정치권력에 영혼 없이, 성찰 없이 유착된 관료주의와 깊게 관련되어 있음. 언제나 눈앞의 성과를 외치지만 정작 민주주의, 창의성, 삶의 질 등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관료체제가 바로 문화정책의 진정한 걸림돌
- (3) 이에 문화행정이 파탄난 국가, 다음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회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해야 할 문화정책은 오직 하나뿐이며,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오직 하나의 정책으로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재검토와 혁신”을 요구함

2. 주요 내용

다음 정부의 문화정책은 오직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함

(1) (가칭)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재 문화행정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수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 구성하여 문화행정 전면 재검토 시작
- 국가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비전 수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운영

(2) 협치와 지역화의 가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확립

- (가칭)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모든 문화행정의 철학과 원리로서 협치(거버넌스)와 지역화 정책을 확립
- (가칭)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은 물론 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 전 과정에 걸쳐 현장

문화예술생태계의 추천 및 협의 등 적극적인 협치 과정 보장

(3)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본질적인 대책 수립

- 위의 두 가지 원칙 속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법률적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 및 대안 마련 추진
-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수준을 넘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사회적 가치 등을 확장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 마련

[참조] <문화예술단체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 경과 공유

1.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문화예술인 약 8000여명, 문화예술단체 약 300여개가 참여했던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이하 예술행동위원회)가 광화문 캠페이션 활동, 블랙리스트 대응 활동, 사회적 연대 활동 등을 통해 박근혜 퇴진, 블랙리스트 관련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 등의 성과를 거두며 광화문 캠페이션 활동 마무리

2.

예술행동위원회를 비롯하여 아래의 단체들을 제안 주체로(추후 누구나 가치와 지향점에 동의하는 주체들은 참여 가능한 개방형 구조) 향후 문화예술 주체들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활동 및 정책 네트워크(연석회의)를 형성하고 활동할 것을 협의하며 준비 중
* 가극단 미래,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극단 고래, 극단 각시놀이,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연대, 문화활동가대회 준비모임, 뮤지션유니온, 민족미술인협회,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어린이책작가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예술행동단 맞짱, 일상예술창작센터,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풍물인연석회의, 지역문화네트워크, 청년예술가네트워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외 (첫 번째 제안 모임 참여 주체들)

3.

제안 주체들은 향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연석회의)의 구성은 개방적인 참여와 논의 과정을 통해 구성하되,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2017년 대통령선거 공동대응 활동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인 제안, 토론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을 협의

4.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을 위한 활동 제안

① 제안 배경

■ 블랙리스트 사태, 박근혜 퇴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들이 대통령선거에 대응하는 문화정책 감시개혁 및 대안 제시 활동에 대한 필요성 제시

- 2017년 대통령선거의 타임 라인(준비시간의 제약), 정세적 특성(국가 문화정책의 파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 책임/불신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과 같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 정책 제안은 불가능한 조건

- 2017년 대통령선거와 향후 문화행정 정상화/혁신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대통령 선거 개입 및 향후 공동활동 전략에 대한 협의와 협력 필요

② 활동 방향

-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의 출발점으로 문화사회를 향한 적폐 청산과 사회 혁신을 기본 전제로 요구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재벌 독점 및 부패 척결, 사드 철회 외

- 다음 정부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약속 _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을 제시

- 이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으로는 3가지 원칙을 제시 : “인수위원회의 수준의 권한을 가지는 (가칭)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비전 수립), “(가칭)문화정책혁신위원회와 관련하여 현장 문화예술생태계의 추천 및 협의 등 적극적인 협치 과정 보장”,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본질적인 대책 수립”

-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공개포럼 등을 통해 취합, 토론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사회적으로 제안 : 공개포럼 및 토론회 개최

- 기타 세부,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 제안 등은 개별 장르, 단위, 모임 등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최대한 상호 협력하는 과정으로 추진

③ 2017년 대통령선거 공동 활동을 위한 공개포럼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7일(금) 낮 2시, 홍대앞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 주요 내용 : 정책 제안 초안 발표 및 토론, 다양한 정책 제안 취합 및 토론, 향후 공동활동 계획 협의 등

④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토론회 개최

- 문화예술계 제안 주체들 공동주최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하순 예정

⑤ 2017년 대통령선거 공동활동 결과보고서 발표

- 진행상황 및 결과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
- 일시 : 5월 초까지 (진행상황 고려하여 추진)

5.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을 위한 문화예술인 공개포럼> 개최

[개요]

- 일시 : 2017년 04월 07일(금) 낮 2시~5시
- 장소 : 홍대앞 가톨릭청년회관
- 공동주최 : 가극단 미래,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극단 고래, 극단 각시놀이,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뜨거운청춘, 문화연대, 문화활동가대회 준비모임, 뮤지션유니온, 민족미술인협회,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어린이책작가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예술행동단 맞짱, 예술NGO-자유공공실천, 일상예술창작센터,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공물인연석회의, 지역문화네트워크, 청년예술가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외
- 참가자 : 문화예술인, 문화정책 연구자,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언론사 등 약 100명
- 주요 프로그램
 - 공동주최 단위의 제안 사항 발표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을 위한 문화예술인 공개포럼> 참조
 - 자유 토론 및 제안

[주요 결과]

(1) 문화예술단체들의 공동 제안으로 <문화예술단체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 _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을 요구한다!>를 추진

① 기본 전제

-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을 위한 출발점으로 문화사회를 향한 적폐 청산과 사회 혁신이 기본 전제가 되어 함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재벌 독점 및 부패 척결, 사드 철회 외

② 다음 정부의 문화정책은 오직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함

- (가칭)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협치와 지역화의 가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확립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본질적인 대책 수립

(2) 문화예술단체들의 공동주최로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 추진

- 일시 : 2017년 4월 26일 또는 27일 오후 3시 예정

- 장소 : 미정

- 공동주최 : 가극단 미래, 강원민예총, 경남민예총, 게임인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광주민예총,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전남작가회의, 극단 고래, 극단 각시놀이, 극단 신세계,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뜨거운청춘,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산업 사드피해 공동대책회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모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대한가수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한국독립PD협회), 문화연대, 문화활동가대회 준비모임, 뮤지션유니온, 민족미술인협회,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부산민예총, 부산영화협동조합,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확립을 위한 연극인들의(블랙타파),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살판, 서울민예총,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세종민예총, 아시아1인극협회, 어린이책작가연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예술인소셜유니온, 예술행동단 맞짱, 예술NGO-자유공공실천, 울산민예총, 인천민예총, 일상예술창작센터, 자바르떼,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풍물인연석회의, 전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제주민예총, 지역문화네트워크, 청년예술가네트워크, 충북민예총,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흥우주사회적협동조합

- 주요 프로그램(안)

- 문화예술단체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 취지 및 경과 공유
- 주요 정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문화정책 · 공약 발표
- 전체 토론 및 정책 제언

(3) 문화예술단체들의 공동입장으로 <문화예술단체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 발표

- 공개포럼, 후보자 캠프 토론회 등의 결과를 취합 및 정리하여 입장 발표, 제안 등 추진
- 보도자료 배포 방식으로 추진 예정 : 5월초 예정

(4)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현장 문화예술인 문화정책 원탁회의> 등 추진

- 문화정책, 문화행정과 관련하여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권한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공개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

[공개포럼 현장에서 제안된 주요 내용들]

* 당일 공개포럼 현장에서 제안된 주요 내용들을 카테고리별로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문화산업정책의 혁신 필요
 - 문화콘텐츠 산업내의 장르별, 산업별 특성 등이 존중된 정책/제도 마련
 - 문화산업정책을 비롯하여 정책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청소년보호법 및 중독 이데올로기 등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지위에 대한 제고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상화 및 활성화
 - 학교 예체능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관람료 면제 등 지원 필요
 - 도서관 확대 조성 및 문화예술 전문 도서관 건립
 -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문화예술교육의 최상위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서 문화적, 교육적 창의성 구현 등으로 재설정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대책 마련
- 예술대학의 지역적 배치 필요
- 학교 교육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을 비롯하여 성장, 경쟁 중심의 정책 철학과 목표를 문화적 가치 확장 중심으로 전환
 - 음악인들의 직업적 안정성 보장 : 표준계약서, 최저임금, 불공정계약 등 개선
 - 혁신적인 디지털/온라인 음원 관리 체계 구축 : 음원신탁제도 개혁, 합리적인 음원 가격 결정, 음원수익 과제 표준안 개선, 저작권격권 재검토 등
 - 음악공연장 운영 혁신 : 공급형 시설 조성 및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음악 생태계와 창작 활동 그리고 혁신적인 운영모델 수립을 고려한 정책 마련
 - 음악을 둘러싼 예술교육제도, 직업교육제도 등에 대한 개혁과 중장기적 대안 마련

■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국정 운용

- 문화예술을 둘러싼 토대 자체를 확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 필요
- 다음 정부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이전에 문화예술생태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문화예술계 현장과 공공기관의 관계 정상화
 - 문화부를 비롯하여 문화행정 정상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및 프로세스 필요
 -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민간 참여 중심의 씽크탱크 구축
 - 정책 제안을 넘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예술계의 역량 강화 및 협치 체계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 문화행정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혁신 체계 필요

- 문화정책 내부의 독립성이 아닌 국가 행정(청와대, 기재부 등) 전반에 걸쳐 문화적 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문화행정 환경 조성
 - 경제적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수립 및 평가 체계 마련
 - 공공기관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 : 이를 위해 문화예술공공기관 특별법 등 제도 개선 필요
 - 예술가들의 자기 결정권, 현장의 구체성 등에 기반한 문화정책/문화행정 수립 및 운용 체계 확립
 - 행정 주도의 문화정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정책 비판과 제

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력하기 위한 공론장(공개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

■ 지원정책 및 제도의 전면적인 혁신 추진

- 지속가능한 삶과 창작이 연결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 환경 구축
-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 수립
- 합리적인 기회 제공, 독립적인 문화예술인, 전문적인 시설과 기관 운영 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 의식주 등 문화예술인의 생활 환경, 사회적 중 다양성 등을 고려한 지원 정책
- 지원행정 절차의 효율성, 투명성, 개방성 등 혁신
- 지원기관들의 현장 전문성, 소통과 협력 능력 강화 : 지원사업의 용역업체 위탁 문

제 등 개선 필요

- 선별적이고 자기증명을 강요하는 현행 지원제도 개혁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 책임자 처벌, 본질적인 대안 마련

-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민간 전문가 참여 등

-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 기타

- 무용 전문공연장 건립
- 무형문화제 법안 및 전수제도 개선

②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및 공약발표

- 더불어민주당 -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문화공약

문화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 문화자유권
- 문화창작권
- 문화경제권
- 문화향유권
- 문화자치권

문화자유권

- **헌법이 보장한 예술의 자유 침해**
 - 블랙리스트로 문화부와 예술지원기관이 검열기구로 전락
 -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침해
 - 다양한 문화를 향유해야 할 국민의 문화권 제한
-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 기본원칙 훼손**
 - 주요 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 불공정한 기금지원과 투용자로 문화생태계 왜곡
 - 선의의 기업메세나 위축

문화창작권

- **문예진흥기금 고갈에도 비선실세 사익행기 계속**
 -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투입으로 향유지원만 증가
 - 순수예술 창작지원 감소와 지원배제로 문화의 본원적 가치 위협
 - 예술인을 동원한 시혜성 무료행사 증가로 '문화는 공짜'라는 인식 확산, 순수예술의 자생적 기반 약화
- **유통 중심 문화산업 구조로 창작인과 중소제작사의 창작 및 발표기회 제한**
 - 대기업의 유통 독과점, 제작 경입으로 불공정 거래 만연
 - 재무능력 중심의 정책금융지원으로 가치있는 콘텐츠에 대한 창작 지원 약화
 - 문화상품 매출 정보의 객관적 수집 제약으로 창작인과 제작사의 정당한 수익배분 저해

문화경제권

- 청년예술인의 꿈을 꺾는 열정노동, 불공정한 수익배분
 - 일자리의 질 낮고 구두계약, 열정노동, 재능기부 등 만연
 - 창작인의 저작권이 보장되지 않는 수익배분 시스템
 - 합리적 보수기준 부재로 일한만큼 정당한 보수 못 받아
- 최고은을 구할 수 없는 최고은법
 - 예술활동 관련 수입 월 100만원미만 예술인 65.1%
 - 고용보험 25.1%, 산재보험 26.0%로 예술인의 4분의 3이 사회보장 사각지대
 - 예술인복지법 산재보험만 지원, 고용보험 법제화 실패

문화향유권

- 소득, 지역, 연령에 따른 문화불평등
 - 문화관람률은 78.3%이나 연1회 기준으로 문화의 일상화에 이르지 못해
 - 저소득층, 장애인, 읍면지역, 50대이상 문화관람률 격차 여전
 - 문화관람의 주요 장애요인은 비용부담과 시간부족
- 생활창작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건 미비
 - 생활권에서의 문화 관람, 교육, 참여 선순환 기반 부족
 -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율 6.9%, 문화동호회 참여율 4.2% 불과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생활문화 정책이 시작되었으나 지자체와 파트너십 결여로 전국적 구상 갖추지 못해

문화자치권

- 지역문화재정 부족으로 국가 이전 재원에 의존
 -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 2로 '2할 자치' 라는 근본 한계
 - 지역의 자율적 사업기획과 투자 어려워
 - 지역 문화수요가 아닌 정부 지원방향에 따라 사업 전개
- 지역문화재단의 정부 위탁기관화
 - 획일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 반영 한계
 -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역문화재단의 비정규직 증가로 경영 악순환
 - 학교예술강사 근로계약 문제를 지역문화재단에 전가, 이를 거부한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정 취소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 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김구, '나의 소원' 중에서)

문화공약

1.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2.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3.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5. 창작과 유통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6.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ی겠습니다.
7.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8.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9. 심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기본원칙

—

- 자율
- 분권
- 협치

1.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 정부·지원기관·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 체결
 -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준수
-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 심의위원 및 심의결과 공개, 심사기록 작성·보관 의무화
-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 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 문화 음부즈맨 제도 도입

2.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반영
-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
 - 표준계약서 의무화
 - 경력,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
 -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 '임금채권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실시
-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 도입, 예술인 보험료 국가 50% 지원
- 예술인복지금고 씨드머니 지원
 - 긴급생활자금, 상해·재난 지원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지자체와 협력, 예술인 임대주택 지원
 -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청년예술인 우선 지원

3.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 창작지원 위한 국고 출연 확대
 - 체육·관광 여유기금의 전출
- 청년예술인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확충
 - 지역 유휴공간 활용 예술창작공간 조성, 청년기획자와 예술인에게 작업공간 지원
 -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 인프라 조성, 청년 콘텐츠 제작자 인큐베이팅
 - 예술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재생 일자리 제공
- 민간 비영리 문화예술공간 지원

4.

일상에서 문화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 문화·체육·관광 지출비의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유아 창의놀이교육 확대
 -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핀란드 아난달로)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지역문화자원과 연계교육 강화
 - 지역 예술단체 및 문화시설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
 - 50+ 세대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가칭) 운영
-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문화기술 활용역량 제고
 -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에 메이커스페이스, 디지털미디어랩 조성
-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 유휴공간 활용 다양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작은미술관, 작은영화관, 마을극장 등)
 - 실버극장 확충,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 생활문화 동아리에 대한 연습·발표공간과 예술강사 지원
-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과 장서 구입 확대

5.

창작·유통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확대
 -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중소문화콘텐츠제작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완성보증제도 절차 간소화 및 출연자본 확대, 성과공유형 전환 등 제도 확대
 - 콘텐츠공제조합의 안정적 자원 확대
-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남용, 담합 등 금지
 - 문화콘텐츠 제작 표준계약서 확대
-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콘텐츠 발굴 육성
 - 예술·과학·기술 융합플랫폼 확대 및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6.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 고도지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공영제 도입
 - 개인, 중소기업체 등의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 확대
-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 문화재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
 -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기반 강화
 - 문화재 일상관리 강화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활용 확대
 - 시도 등록문화재 지정제도 도입
 -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지역역사문화 재생사업 지원
 - 3.1운동 100주년 계기 독립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및 기념사업 추진
-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

7.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균형발전

- 문화균형지수 개발, 낙후지역 우선 지원
-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
 -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선택적 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출연
-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 자율성 보장
- 지역문화재생 사업 확대
 - 폐산업시설, 원도심 노후건물, 지하도·지하상가 등 활용 지역문화재생 사업 지원
 - 민간주도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의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 문화도시 지정 및 집중 지원, 문화관광 연계 활성화

8.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 체육계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 강화
 - 체육단체의 자율성 보장
- 체육특기자 입시전형의 획기적 개선
 -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 양성(최저학력제 도입)
 - 체육특기자 수업참여 보장 및 학사관리 강화
 - 선수생애관리제 도입
 - 학교체육진흥회 설치, 학생체육대회 분리 개최
 -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유기적 시스템 구축
-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국민 스포츠'로 전환
 - 유아, 노인, 청소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스포츠 확대
 - 초등학교 생존 수영 의무화 추진
 - 지역 단위 공공스포츠클럽 도입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8.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 **체육인 복지 증진과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 체육인복지법 제정 및 체육인복지 재단 설립
 -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스포츠기업 확인제 도입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 은퇴선수 취업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의무화
- **남북 체육교류 재개로 남북의 화해 협력**

9.

심포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 시행) : 정부, 기업이 근로자의 여행경비 매칭 지원
 - 관광지, 호텔, 관광버스 등 무장애(장벽 없는) 관광환경 조성
 - 대체공휴일제 전면 시행
 -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지원
-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 개별 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 외국어 안내체계, 교통편의 제고 등 통한 외래관광객 유입 확대
 - 개별관광객에 최적화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관광산업 육성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육성
 -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및 여행상품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관광명소제도 도입,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지정 및 집중육성
 - 지역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관광영향평가제도 도입, 국민관광신탁제 도입



②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및 공약발표

- 국민의당 -

[안철수의 약속 : 문화분야]

비전: 역동적, 창조적인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문화국가

목표 1. 문화가 있는 삶의 구현

- ①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② 문화가 있는 삶과 행복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 ③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④ 전통의 창조적 계승에 힘쓰고 문화다양성 국제교류를 선도하겠습니다.

목표 2. 문화산업 발전의 지속 가능성 확보

- ① 공정성장과 다양성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② 정보통신 융복합 콘텐츠를 문화예술로 아우르는 대중문화산업정책을 펴겠습니다.

목표 3. 다양성이 보장되는 체육 생태계

- ①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엘리트체육이 빛나는 선진 체육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4.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

- ② 융복합관광 고부가가치 창출과 관광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예술은 우리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예술은, 기쁨과 고통 등 다양한 감정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나누면서 위안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 혹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이해심 있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 사람을 수단이나 목적으로 보는 사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서 실질적 자유를 증진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이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에도 참여할 수 있는 관계 역량과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사회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관계 역량과 사회적 상상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생애주기에 걸친 일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문화예술의 본원적 역할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개념(비전)이 바로 ‘어떤 시스템이 견뎌낼 수 있는 변화의 정도’ 혹은 ‘외부의 교란을 흡수해낼 수 있는 시스템의 역량’이라 정의되는 ‘회복력’이며, 이 회복력이 강화되고 확장될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아름다운 문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와 공정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저 안철수는 아름다운 문화국가를 바라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문화적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창조성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국정 운영의 기본 가치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문화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문화수요를 충족하며, 지구촌 모든 구성원과 평화롭게 교류·소통·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이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기운을 북돋우고, 그 공동체는 문화예술인의 삶을 보살피는 신뢰와 상생의 문화사회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창조적 표현이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의 핵심요소가 되는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목표 1. 문화가 있는 삶의 구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예술정책의 ‘팔길이 원칙’이 실종되었습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소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블랙리스트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가치를 통제하고 예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였습니다.
- 많은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활동이 가로막혔습니다.

국정과제

-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문화행정 혁신**
 - 역사적 교훈으로 삼도록 블랙리스트 백서를 작성해 공개
 -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 창작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가칭)문화예술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인 ‘움부즈만위원회’ 제도 시행
 - 문화예술계 내부의 불공정행위 해소
-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문화예술인 중심의 자율기구로 혁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 위원장 호선제 도입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전적 해체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개편
 - 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공기관의 자율운영 체계 마련

실천계획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추진(2017년까지)
- 감사원의 감사와 별도로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목표 1. 문화가 있는 삶의 구현

문화가 있는 삶과 행복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문화 향유는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지만, 문화격차로 인해 모두가 누리지는 못합니다.
-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 누구나 누리는 필수 문화기반시설 확충
 - 생활문화센터·도서관·박물관·미술관 확충
 - 작은영화관(영화관 없는 기초자치단체)·미디어센터(행복생활권) 확충
- 문화행복 전달체계 완비와 문화행복 관련 좋은 일자리 확충
 - 학교·마을(지역) 결합형 창의문화교육 강화와 생활문화 활성화
 - 공동체라디오·마을미디어 등 자치분권 공동체미디어와 미디어교육 활성화
- 문화기본권 지표 관리와 지역·계층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공공성 확보
 - 기회, 참여, 효과, 지원 체계 등의 지표 설정
 - 농어촌 서비스 기준, 행복생활권 개념 등이 반영되는 지표 관리
 - 1만 표본 이상의 '문화행복 패널' 운영을 통해 문화정책의 품질 제고
- 문화기본권 보장 정책 수립과 실행
 - 기초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문화권이 포함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가칭)문화행복지원센터를 통한 문화기본권 취약계층·지역 집중 지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문화행복 경제활동 활성화

실천계획

- 임기 내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복권기금 의존도가 높은 문화향유 영역 재원조달 방식을 국고 지원으로 전환

목표 1. 문화가 있는 삶의 구현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단발성 프로젝트, 비정규직, 저임금, 도제식 인력양성 체계 등으로 문화예술인의 노동 환경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 사회적 권리 보호 등이 취약합니다.

국정과제

-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반영
 - (가칭)문화사회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
 - 아고라 방식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칭)예술인 평의회 개최
-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확충
 - 예술인 적정 근로조건과 권익보호를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
 -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개선하고 독립적인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 (가칭)예술노동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예술의 근로조건을 개선
 - 비정규직·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계약과 창작권리 보장
 - 예술인 4대보험 지원과 재교육 인센티브 제도 확대
- 불합리한 보조금 관리시스템 개선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의 문제점 해소
 - 예술경영 지원 협동조합, 예술인 파트너십 협동조합(프랑스의 프리랜서 참여 사업 고용협동조합/CAE 사례 활용) 등을 통한 피어(동료) 컨설팅 강화
- 문화예술 진흥 재원 부족 문제를 국고지원 확충 등으로 해소

실천계획

-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가칭)문화사회위원회 실무추진단 조기 발족
- 국고 지원과 공공기금 간 진출입제도 활용한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목표 1. 문화가 있는 삶의 구현

전통의 창조적 계승에 힘쓰고 문화다양성 국제교류를 선도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9조)”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정책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 “통상 개방의 전도사가 되자”는 대외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국제교류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창조성의 중요 요소인 포용성도 부족합니다.

국정과제

•문화재 보존 관리와 창조적 활용

-문화자원 조사 체계 개선과 문화재 보수·복원·방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통합 컨트롤 시스템 마련

-지정문화재 확대와 미래 예비문화재 관리 등 지정 문화재 관리방식 개선

-중요 무형문화재 선정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로 전통기술의 전승과 보전

•적극적인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활용과 전통문화 국제교류 활성화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유네스코 등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선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DA) 실천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활성화와 연계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권리 신장과 역할 강화

-예술공연(E-6) 비자 제도 개선과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성화

실천계획

•문화재 관련 법령 정비

•문화다양성 증진 협약의 충실한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정부, 지자체, 유네스코, 문화예술계 등 참여)

목표 2. 문화산업 발전의 지속 가능성 확보

공정성장과 다양성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문화콘텐츠산업의 규모(2015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0조4863억 원)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배급자-창작자 사이의 분배 정의가 실종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 대기업 중심의 문화콘텐츠 유통 독과점으로 창작자의 권리가 위축되었습니다.

국정과제

- 문화산업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쟁·공정거래 실현
 - 문화콘텐츠 종다양성 확보와 유통 불공정 문제 해소
 - 영화 : 배급업과 상영업 겸영 제한, 특정 영화의 최대 스크린 수 제한, 다양성 영화 전용 상영관 확대
 - 음악 : 음원 수익 배분에서 유통사업자 몫 축소와 창작자 몫 확대
 - 출판 : 출판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도서정가제의 완전한 정착, 대형 온-오프라인 업체 위주인 베스트셀러 집계 방식의 다원화
- 문화콘텐츠 저작권 강화
 -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확대 적용
 - 문화콘텐츠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게임, 전자책, 웹툰 등의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유통 현황을 상시 공개하여, 공정한 수익배분이 가능한 환경 조성
- 문화 관련 세제 개선과 소셜펀딩 활성화 환경 조성

실천계획

- 2017년도에 관련 법령 개정
- 2018년까지 공정경쟁 기초 환경 조성

목표 2. 문화산업 발전의 지속 가능성 확보

정보통신 융복합 콘텐츠를 문화예술로 아우르는 대중문화산업정책을 펴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콘텐츠를 미디어와 정보통신(ICT)의 부속물로 보면서 플랫폼 사업자,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디바이스(기기) 사업자 등 위주의 ‘외형적, 양적 성장’을 추구하여, 정보통신 융복합 콘텐츠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중소 제작사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면서, 중견 경력직 핵심인력이 인력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국정과제

- **중소제작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내실화의 여정으로 대중문화산업 정책 혁신**
 - 중소제작사의 위상 강화와 창작 핵심인력 역량 강화
 - 대중문화콘텐츠를 매개하면서 광고, 통신료 등에서 수익을 내는 플랫폼·디바이스·통신 사업자의 기여에 의한 대중문화산업 진흥 재원 조성
 - 지역 특화콘텐츠 육성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대중문화 향유권 확대로 전환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전적 해체와 대중문화산업 진흥체계의 효율적 재구성**
 -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의 문화콘텐츠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핵심 기능으로 설정
 - 진흥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통합 조정하는 대중문화산업전략위원회 운영
 - 대중문화 통상 진흥, 문화기술(CT) R&D 등의 강화 방안 마련
- **대중문화콘텐츠 유통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저작물 중심에서 이용권과 아이템 중심으로 정책 전환

실천계획

- 대중문화콘텐츠 유통 촉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대중문화산업 관련 법령 전면 개편

목표 3. 다양성이 보장되는 체육 생태계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엘리트체육이 빛나는 선진 체육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분리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일반 학생들은 체육시간에 다른 과목 자습을 하고, 학생 선수는 기본 학습권조차 박탈당합니다.
- 인기몰이식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로 예산은 낭비되고, 환경 파괴와 같은 큰 사회적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정과제

- 체육활동 지표 관리를 통해 생활체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자원 투입, 과정, 효과 등의 지표 설정
 - 생활권 단위 국민체력인증센터의 확대 설치
 - 지방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완전 통합 실현
 - 독일식의 생활체육 방식인 리그제 도입과 대표급 선수 연계 선발
 -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확대
 - 체육 일자리 창출
- 체육활동의 교육적 역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1인 1스포츠 정책
 - 학생 시절에 익힌 스포츠를 평생 즐기며 살 수 있는 연계 시스템 구축
 - 학교스포츠강사 등 학교체육·생활체육 지도자와 매개 인력의 처우 개선
 - 학교 스포츠클럽과 운동부의 통합 운영을 통한 선수 저변 확대
 - 체육 특기자 전형제도 개선과 학교스포츠연맹을 통한 학생 선수 지원
-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 관련 사전 승인과정의 개선
 - 지방의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맡겨져 있는 대회 유치 승인과정 개선
 - 타당성 조사와 국회 예산 승인과정 심사 강화

실천계획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체계 개선
-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BTL방식 등 민간 투자 활성화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

목표 4.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

융복합관광 고부가가치 창출과 관광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관광업계 전체가 휘청대고 있는 것은 우리 관광업이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 들어오는 관광객에 비해 출국 관광객이 많습니다(2016년 1724만명 대 2238만명으로 30% 초과).
- 관광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어야 하며, 관광 스타트업 지원체계도 취약합니다.

국정과제

- 모든 사람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
 - 대체휴일제, 연차 다 쓰기, 체크바캉스 제도 등을 통한 여행 참여 환경 개선
 - 장애인·시니어 관광객 편의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전면 적용
 - 내일로 패스 등의 이용 대상 확대로 지역관광 활성화
- 외래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 역량 강화
 - 수요기반형 관광상품 공급과 표적시장 다변화로 시장구조 안정화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관광수용태세 조성
 - 관광상품 품질관리체계 강화와 외래 관광객 유치 시스템 전문화
 -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을 이끌 R&D 역량 강화
- 지역 관광자원 개발과 품질 개선으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 지자체 관광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컨트롤 시스템 마련
 - 관광자원을 유형유산 위주에서 축제·창조인력·시스템 등의 문화적 자원까지로 확장
- 창업·창직·구인 주도 강소형 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마련
 - 관광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MICE(마이스)·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영역 지원 확대
 - 기업 간 공정경쟁 협약 체결 등을 통한 선진 산업생태계 만들기

실천계획

- 관광진흥 법제 개편과 관광재정 확충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융복합관광 집중 육성

②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및 공약발표

- 정의당 -

정의당 문화예술 공약

- ① 「블랙리스트 방지법」 과 문화예술의 가치 확립
- ②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확대
- ③ 문화예술 정책·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 ④ 학교와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 ⑤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 ⑥ 예술지원 및 예술인 육성 정책의 전환

① 「블랙리스트 방지법」 과 문화예술의 가치 확립

진단

-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예술가(단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여 「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였음에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과문 발표 정도로 셸프 사면을 하고 85억원의 돈을 풀어 예술가들을 회유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방지법’ 입법을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문화예술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임을 전 국민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약속

- 블랙리스트 관련 부역자 엄중 처벌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법적 처벌과 함께 징계를 통한 인적 청산
- 「블랙리스트 방지법」 입법과 문화예술 관련법 정비
 - 지원사업의 공정성 강화
 - 공무원의 위법 행위 예방·처벌 강화
- 방송사 일정 비율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배포

②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확대

진단

- 문화예술인들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에서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와 고용보험료 지원 등은 배제되었음
- 공공부문 문화예술인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며, 고용형태별로 임금 격차가 심함
- 현재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임

약속

-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세분화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확대. 특히 공연과 방송출연자 개런티 등급 간의 격차 완화
- 예술인복지법에 ‘근로자 의제’를 신설하여 문화예술 노동자로서 기본권 보장하고 산재보험 지원 확대와 고용보험 도입
- 방송, 출판 등 문화산업분야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노동인권 보장
- 예술인 복지예산 대폭 증액 등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해 생활위기 예술인 긴급지원
 - 예술인 인정 범위를 문화예술 교육 분야까지 확대
-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 OECD 평균 수준으로 문화복지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고용 확대

③ 문화예술 정책·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진단

-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 주도의 중앙 중심적 구조임
- 현재 시행중인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음
- 문화·체육·관광 재정은 국가재정의 6.6%를 차지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분야의 재정 상황은 매우 열악함
- 문화산업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커지고 있음
- 문화콘텐츠산업은 행정기관의 심의와 검열,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음

약속

- 문화예술위원회 전면 개혁, 문화예술 지방분권화
 - 중앙 및 지역에 민간 주도 장르별 위원회 구성
- 정부·지자체 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문화재정 확충
-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 문화예술의 다양성 보장 과 지속가능한 문화 산업 지원
- 문화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④ 학교와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진단

- 문화예술교육은 감수성, 창의력,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합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정량적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간의 역할 구분이 불분명해 기관들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 정책은 학교 예술강사들에게 반복적인 단기계약과 10년간 강사수당 동결을 방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올해부터 예술강사의 최대 수업시수를 하향조정해 추가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약속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교육 개편
 - 문화예술교육 확대.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교육 과정에 문화예술 강사 의무배치
 - 국가표준등록금으로 예체능계열 대학생의 등록금 등 학비 부담 완화
- 동네에서 누리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적 문화생태계 구축
 - 지역별 예술단체와 연고 예술인 제도 확립으로 생활 속 예술 실현
 - 읍면동 단위의 주민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예술강사) 정규직화

⑤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진단

- 국민들의 보편적인 문화적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최소기준’ 설정에 대한 정부·자자체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지자체들은 지역문화 진흥계획에 관한 자율적인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음
- 2005년부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로 공공문화시설이 민간투자로 세워지면서 보편적인 접근권과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음. 또한 유희공간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 심각한 지역도 있음
-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적자누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약속

- 문화기본선 도입으로 문화격차 해소
 -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생활 향유권 보장
- 지역문화정책과 생활예술 활성화와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전문성 강화
- 지역내 유희공간을 주민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
- 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
 - 지역 내 대중소 공연장의 주말 상시 공연 추진
 -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미술 전시 공간 확보
 -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순회공연, 전시회, 시사회 정례화

⑥ 예술지원 및 예술인 육성 정책의 전환

진단

- 현재 우리나라 예술 지원은 일반 사업과 같이 공모 중심이어서 문화예술의 특성이 맞는 지원 정책으로의 기조 변화가 필요
- 우리나라는 대학이 예술인 양성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장과 연계가 부족해 졸업 후 진출 기회 거의 없음
-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이 예술인 양성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장과 연계가 부족하고 실제로 졸업 후 진출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임

약속

- 기성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찾아서 지원’
- 투자 유치나 홍보 마케팅 지원에서부터, 외국 작품 저작권이나 인적 정보력 지원, 관람료 대부분 지원까지 ‘맞춰서 지원’
- 신진예술인 대상의 소액 다건이나 보편 지원 등은 ‘무조건 지원’
- 사전지원과 사후지원,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다액소건(선택과 집중)과 소액다건, 단년도 지원과 다년간 지원, 일시 지원과 지속 지원 등 유연하면서도 복합적인 면을 고려한 지원
- 권역별로 국립예술단체 확대, 광역단위별 공립예술단체 확대 운영
- 전문 예술인 양성지원을 위한 예술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 졸업 후 상당기간의 추적조사를 기반으로 예술 활동지수 개발하고, 예술 영재교육도 정비함

**③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을 위한
문화예술인(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을 위한 문화예술인(관련) 설문조사

(주관: 한국민예총+한국문화정책연구소 / 대상: 예술(인)관련 / 배포: SNS, 문자링크)

■설문자의 장르/지역/소속은?

| | |
|----|--------|
| 서울 | 21.00% |
| 전북 | 15.70% |
| 부산 | 13.15% |
| 울산 | 7.89% |
| 충북 | 7.89% |
| 강원 | 5.26% |
| 경기 | 5.26% |
| 광주 | 5.26% |
| 경남 | 2.63% |
| 경북 | 2.63% |
| 대전 | 2.63% |
| 세종 | 2.63% |
| 인천 | 2.63% |
| 전남 | 2.63% |
| 충남 | 2.63% |
| 합계 | 99.82% |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해법은?

- ▶관련자조사와 처벌
- ▶결과에만 지원하도록 정책 변경
- ▶정부 내 예술지원 투명성 기구 설치
- ▶관련자 파면 및 독립적 기구와 감시기구 설치
- ▶향후 이런 일을 확실히 예방하고, 그간 불이익을 받은 예술인에 대한 보상적 지원을 함
- ▶책임자 처벌 및 리스트 해당자 명예 회복과 보상이 있어야 함.
- ▶공모사업 심사 및 심의위원 평가 공개. 블랙리스트 예술단체, 개인들에게 보상
- ▶문화부처 독립성 보장
- ▶담당자 즉각 구속, 재발방지법 제정
- ▶적절한 배상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

- ▶ 줄서기 용 예산 편성은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 바랍니다.
- ▶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자 처벌. 블랙리스트 폐기
- ▶ 이미 법의 정의로운 해결 요청을 한 상태이니 기다리며 방법 결정. 지자체의 불합리는 지자체에서 방법적으로 해결.
-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 그리고 책임자 처벌
- ▶ 불법행위에 대한 응당하고도 교훈적 차원에서 준엄한 법적 제재 반드시 관철해야.
- ▶ 관련자 처벌 및 공직사퇴·재발방지 제도 마련
- ▶ 지원 선발 과정의 인적, 제도적 투명성
- ▶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함. 선정권을 민간으로 돌림. 내부 제보자 보호를 통해 블랙리스트 같은 사태가 있을 때 문제가 쉽게 제기될 수 있도록 함.
- ▶ 리스트 작성자와 이를 실행한 현장 실무자까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는다.
- ▶ 사건 실체의 명확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
- ▶ 상상 자체를 못 하도록 하는 방지책으로 책임자 및 관련된 사람을 전수징계.
- ▶ 해법이 있을까요?
- ▶ 정권의 문제요, 국가시스템의 문제다.
- ▶ 수월성, 대중성 원칙 정립. 팔길이 원칙은 지나치게 추상적임
- ▶ 진보정권 창출
- ▶ 관련자 구속
- ▶ 통제에서 자율로
- ▶ 블랙리스트들에게 지원하라
- ▶ 고질적인 패권적 통치로 인한 관행이었지만 이번 박정부의 졸렬한 정책임을 반면 교사하여 차기정권에서는 블랙리스트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적극 대응하는 참신한 미술행정을 연구, 실험할 수 있는 토양을 쌓는 정권이 나와야 할 것이다
- ▶ 팔길이 원칙의 법제화
- ▶ 문화예술 행정 및 지원 정책 등 공개적 원칙 제도적 장치마련, 진보, 보수진영 문화예술단체 패거리(기득권)의식 청산,
- ▶ 헌법에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어있어도 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방지법만으로는 한계 있어. 사회 전체의 예술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임. 따라서 정규교과 과정에 "문화예술"과정 확대 필요
- ▶ 작성 지시자 엄중 처벌 제발 방지책 마련발표
- ▶ 예술작품이든 예술가든 정부는 손대지 마라
- ▶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 ▶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 ▶ 처벌
- ▶ 블랙리스트 전체 삭제와 문화예술지원 시스템(정부개입 최소화) 의 전면 개편
- ▶ 방지법 운운하지만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블랙리스트는 존재했고 존재

할 것이라 어찌할 방법은 없다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지원정책의 전면적 변화 - 예술인 기본월급배당제도의 도입, 카르텔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심사를 통한 지원제도의 변화가 필요

■본인이 느끼는 예술현장에 필요한 정책은 이런 것?

▶예술인의 복지

▶결과물 도출 현상에 지원책 필요

▶지원신청서 없는 지원 사업

▶문체부 축소 및 문화예술기관 자율성 확대

▶예술지원 사업에 있어서 모든 지원금을 시상금 형식을 취하여 진행과 정산의 편의성을 확보, 단 철저한 모니터링 및 향후 보고서를 통해 계획과 맞는 사업의 이행 여부 확인

▶예술 정책이 넘 성과위주이고, 공연 쪽에 몰려 있다. 문학은 부익부 현상이 넘 심하고 일부만 누리고 있다. 개인의 창작활동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지역 예술인, 단체에 대한 배려와 지원, 특히 예술행정의 정산위주의 잣대보단 예술인의 활동 보장 관점에서 정책 개발

▶4년제 대학 내 예술학과 축소 (문화 수요와 창작자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음)

▶지방의 예술인의 참여 지원 방안 정책 지자체와 협약

▶창작지원 및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렴한 창작, 마케팅 공간 확보 바랍니다. 예를 들면 대학로 공연장 건물 주들에게 시가에 맞는 보상을 해주고 매입하여 예술가들에게 제공.

▶운영비. 관련 종사자 인건비. 행사비 지원

▶정책을 위한 정책 자문단, 기획위원등을 구성하지만 활용도가 빈약하고 민간단체 예술가 정책을 내도 수용의 자세가 안 되어 있어 문제. 지역 문화의 담론을 지속적으로 파헤치고 내용을 언론회 하면 공식 공문으로 전달.

▶운영비. 관련 종사자 인건비. 행사비 지원

▶저소득층 예술가 지원 확대

▶현재 상황을 만일 뿌리 없는 무 민족적 잡탕이나 비판적 관행의 풍토임을 수궁할 경우, 늦은 만큼 유구하고 고유한 민족성의 탐색, 교육, 현대적 재창작 지향할 정책선도 분발 요망.

▶창작지원금정산제도개선 · 문화예술 교육제도 확대 · 예술인 복지제도 개선

▶부동산가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공공 부동산으로 만들어진 예술인촌, 예술 특화거리

▶문화예술인에의 직접 지원 못지않게, 그들이 자립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하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 수 있도록 함. 예컨대 공신력 있는 문화예술인 단체(협동조합이면 더욱 좋음)에 교육예산을 지불하고, 이를 통해 저변확대와 함께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비수기인 1월 ~4월까지 예술인들이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책이 절실함.

- ▶ 좀 늦더라도 예술(인)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랍
- ▶ 예술행위의 하도 급 만큼은 없어야 됨.
- ▶ 지방의 작은 예술 단체들을 위한 정책. 대형 뮤지컬이나 연극이 아닌 어린이를 위한 작은 인형극이나 동극이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에겐 표가 없어서 늘 뒤로 물러납니다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은 어디서 찾을까요? 어른은 표가 있으니 실버들에게는 문화가 넘쳐 나기만하고.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문화를 정착하였으면 합니다.
- ▶ 정책은 정치적 책략인데, 정치가 예술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책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술 정책보다는 사회정책 속에 언론사상표현의 자유와 복지의 확충이 바탕이 기본이겠지요.
- ▶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월성 강화
- ▶ 적극적인 활동보장, 편견 없는 지원
- ▶ 장기적 안정적 지원시스템
- ▶ 1년이 아닌 3년 혹은 5년 동안 지속 지원 후원
- ▶ 지역 균형 문화발전을 위한 지역지원정책수립
- ▶ 과히 시각문화의 혁명시대이다. 빠른 흐름 속 세상의 콘텐츠에 걸 맞는 신속한 행정력과 문화정책의 유연성만이 뒷쳐진 계도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 ▶ 지역 문화재단의 독립성
- ▶ 지원중심 정책에 대한 문제점 개선, 생활예술활성화, 건축 장식미술 철폐 및 대체 방안마련(일자리 등 도시재생관련)
- ▶ 공공이 정책을 주도하지 마라
- ▶ 창작 표현에 자유 보장 및 차별금지
- ▶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 것
- ▶ 기초생활보장, 개인 결과물 보다는 과정에 지원
- ▶ 예술가들의 직접 참여방안 필요
- ▶ 시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미술, 미술인들의 지역발전 참여에 봉사하는 미술
- ▶ 예술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고정수입 정부차원의 보장
- ▶ 다양한 전시와 공연 기회 부여

■ 문화예술 행정(기관)운영의 독립성을 위한 핵심과 개선책은?

- ▶ 법으로 보장
- ▶ 지원 심의방법 민주화 필요
- ▶ 문화부 해체
- ▶ 인적 쇄신
- ▶ 팔길이 원칙, 국가나 시도정부에서는 지원과 큰 틀에서의 정책만 서로 공유하고 일체 간여를 하지 않는다.
- ▶ 사실 정부나 민간위탁이나 끼리끼리 다 해 먹는다. 답이 별로 없다.
- ▶ 기제부나 문화부, 청와대로 부터 독립성을 갖는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

확보 방안

- ▶누리 집에 예산 집행내역 상세 공개, 각 기관장 선출에 정부 개입 금지
- ▶예산의 독립성, 균형 평등 보장
- ▶당장은 전문가들의 채용으로 전문성 부여가 시급하다고 생각됨
- ▶문화부총리 별도 신설, 교육부 폐지
- ▶운영비, 인건비의 지속적 지원
-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에 누를 줄수 있으니 문화재단 정도의 민영화가 필요함. 문화예술 부서가 기피 업무에 해당하니 참으로 문제임.
- ▶운영비, 인건비의 지속적 지원
- ▶민관 거버넌스의 확립. 예술가 의견 수렴기구 정식화
- ▶민간 감시기관, 가령 활짝 열린 광화문문화사령부 수준의 일상적인 견제감시가 요구됨.
- ▶기관장 공개 채용
- ▶협치 정신에 기반한 투명성
- ▶기본소득은 특히 문화예술인에게 필요하다
- ▶문화 예술인들이 상시 감사 할 수 있는 견제시스템을 구축한다.
- ▶문화예술위원회는 그 자체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위획득과 예산운영권이 확보되어야 함.
- ▶독립적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운영자와 책임 및 구상권 유책화.
- ▶독립한다고 문화예술의 형편성이 골고루 나누어질까요? 힘있는 단체의 소유물로 전락 할까봐 걱정됩니다.
- ▶독립성을 논하기 전에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먼저 숙고해야. 예술이 독립하기 전에 먼저 사회적 기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내려놓을 때 독립성은 사회가 보장해 줄 것입니다.
- ▶민간 위원회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K pop이나 드라마 등 예술의 경제적 문화적 비중이 막강함을 인식하여 독립부서를 만드는 정책
- ▶예술인 감사제도 도입
-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을 위한 문화예술인 공개포럼 결과를 적극반영 지원하되 간섭 말라.
- ▶어려운 문제이나 전문영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원과 연구
- ▶이사장 외부공모제와 재단운영기금 법제화(지자체예산1%). 민간 지역문화예술위원회설치 의무화
- ▶대다수 공공예술시설 및 지역문화재단의 획일화 된 운영 문제점 개선 시급, 학벌, 학연위주 인사정책, 주기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공청회개최 다양한 여론 수렴, 지역문화예술 퇴보시킨 문화권력자들 차지단체 문예위원 활동제어(독립성 저해 원인임), 관련 행정관들 지원을 무기로 예술인들 불모. 등등 많음
- ▶인사와 예산이 기관의 독립성 확보의 기본임. 기관장 인사 개인 최소화와 주민소환제와 같이

현장예술인이나 기관 직원들이 해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필요. 더불어 공공 예산지원을 위한 과정을 필요하겠으나 문화부 혹은 자치단체의 세부적인 예산간섭, 사업 간섭 막아야함

▶문화예술 행정 관료들 문화기관의 내부에 두지 말거나 단순 행정업무에 국한해야 한다.

▶단기 성과주의 근절, 민간 전문인 확대

▶민관 연구기관 및 정책개발기관 마련

▶비리고발, 식견있는 전문가들이 운영, 미술품 매매의 투명성등.

▶행정기관의 일원화와 실질적 예술인의 행정인력 양성 및 실전 배치

▶흠... 어떻게 독립되든 상위집행기관의 영향을 받을테니.

▶교부된 예산에 대한 중앙부처, 지자체의 실적 요구와 평가가 없어야 됨. 현재 이나라 시스템, 경영평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대부분 문화재단)와 같은 줄 세우기식, 무지한 획일화된 통제 시스템을 폐지시켜야 됨. 갈수록 행정화, 문서화 되가는 전문인력에 대한 위상을 강화해야 됨. 이를 위해 기관장이 선거 후 낙하산식 인사가 아닌 내부 전문 인력들의 승진을 통한 무임기가 필요. 아니면 정말 전문 인력(외부이든 내부이든)의 기관장 계약종료년도가 없는 무임기제도 등 도입이 필요

■정부(기관)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운용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의 입장을 반영

▶순수문예지 발표작에 대한 지원 필요

▶무조건적인 현장 정책의 최우선화

▶자율성 독립성

▶현장으로부터의 요구를 받아 진행, 전문가나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수립은 꼭 시범사업을 거쳐서 운영하길 바람

▶투명성과 지속성

▶순수예술, 특히 전통예술에 대한 화장과 지역 전통예술에 대한 활성화 방안 수립

▶문화예술 창작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함. ex) 학생에게 무료 관람권 지급 등

▶투명성 적극 반영 의지

▶행정과 시혜에서 예술가들을 중점으로 하지 않는 행정의 편익이 우선되는 것을 몇 번 느끼게 됨

▶예산규모를 3% 이상으로 편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정책 자문단 구성. 현 단계에서는 인수위가 없으니 각 단위 대표가 참여 하여 정책 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예술가와의 접점을 다변할 것.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는 점

▶헌법가치이자 예술상식인 표현의 자유를 담보해줄 사악한 풍토 불식 요망 : 새 정권 임기초반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 및 피해 문화인 복권

▶문화예술 분야 예산증액·예술인들의 창작 자율성 보장·지원금정산제도개선·예술인 복지제

도 확충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기, 단기 가시적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을 지양할 보완책

공공성과 정당성

▶팔길이 원칙, 장기적 안목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정책이 단기적이라는 데 있음. 문화예술 미래비전을 확인할 수 없음. 이는 문화예술의 향후 10년 또는 그 이후의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임. 부족한데로 참여 정부시절의 새예술 정책 등을 참고할 수 있을듯함.

▶기초연구의 독립성 유지

▶수립과 운용 모두 중요하지만 힘없는 작은 예술단체들도 관심 가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

▶미래지향적 가치, 자율과 전위를 포용하는 정책

▶관료가 아닌 예술인의 손으로 예술정책이 만들어져야함.

▶문화예술계 의견 설문 등 취합 수립

▶현장의 필요와 고민을 적극 반영

▶예술인들의 예술성이 개발, 발전 가능한 지원

▶공공을 기반으로 하는 미술연구소의 데이터분석작업과 현장중심의 연구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팔길이 원칙 준수, 문화관련 전문행정 추구

▶허술한 예술인지원정책보완,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육성, 문화 소외지역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등 및 이에 따른 자금운용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게끔 제도화해야. 정작 중요한 정책결정시에는 예술인들 배제되는 사례 많아.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예술인들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예술인 참여 예산제도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반영하는 일

▶지방 문화예술관련 예산 자율성 확보, 공모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지방은 불리

▶예술가, 예술단체등 정부와 소통 공간 필요

▶공공의 이익, 젊은 예술인 배려

▶실제 문화 예술현장에서의 적합성의 여부

▶당사자(예술가)의 참여

▶보여주기 식 행정, 문서화 규격화 획일화 된 계량적 지표로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근절해야 함. 근본적인 문화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됨

■문화예술의 소수자, 문화다양성, 지역분권을 위한 제안은?

▶좋은 작품을 발표한 문인 지원 강화필요

▶지역자치&자율의 예술(인) 기구 설치

▶분권형 자율기관 설립

▶국, 시비를 마련하고 전국의 모범적인 사업구조를 만들어 동시에 진행, 단, 지역의 특성을 반

영할 수 있는 사업의 여지를 열어두고...

▶지역문화재단의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독립과 행정직 공무원없는 완전 민간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서울 집중을 막아내기는 불가능

▶대통령이 직접 주재 법률 및 기구

▶다양성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창작자의 예술적 가치를 적용하는 척도가 필요하고, 지역분권은 지극히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 듯

▶대학로 같은 공간을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

▶희귀 문화예술 분야 독립적으로 운영 분명한

▶지역 예술가 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 정책, 학과지원사업 확대. 모든것이 해결됨.

▶문화예술계 내부로부터의 발상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술에 대한 근본적 인식전환 필요 · 지방 자치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예술지원

▶대학교수들의 창작지원금 신청 제한, 균형을 위한 지역 쿼터제, 장르별 심사 축소

▶지역문화진흥법은 시행령까지 발효되었으나 유명무실함,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는 것이며, 본 제도이행에 무관심하다는 데 있음. 따라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의 입장표명을 반드시 받아야함. 한편, 소수자와 다양성 분야는 사실 문화기본법 등을 통해서 보다 정교한 설계가 요구됨.

▶문화예술 창작은 0차 산업의 의미 확산과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구축

▶찬성입니다

▶겸손할 것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충

▶문화패권주의 타파를 위한 예총의 밥그릇싸움 종식을 위한 파벌해체 예총재편 예술인대표 필요

▶문화예술인직접 참여 예산제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지원

▶담보적인 축제를 일회성집약성필요 전문예술행정요원확충 장기적 전략화

▶지역 문화예술 의위원회 혹은 지역문화재단 내에 특별사업단위를 문화재정의 쿼터제도입 문화다양성, 문화예술소수자, 독립예술인 및 공동체 등 전문 인력 발굴 양성의 저해 요인인 예총, 민예총 기득권 개입, 혹은 기관의 지원을 무기로 한 예술인 줄 세우기 타파만이 지역분권 단초가 마련됨

▶예술가가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간지원조직의 현장성이 커져야함. 대부분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인력들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결국 현장과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문서와 제도에 파묻혀 정작 현장은 자문회의 정도로만 경험하게 됨.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특별 기간을 두었으면 함. 교수들의 안식년처럼 현장 근무년을 뒤서 문화행정 전문 인력을 현장예술단체 파견하는 것도 방법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문화지원을 지역으로 고루 배분하는 일

- ▶지방 문예진흥 기금의 고갈 확충방안 마련
- ▶지역의 예술가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역의 소속 예술가들이 그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
- ▶최소한의 기본적 활동 보장(수입 및 활동기반 조성등)
- ▶다른 장르는 모르겠으나 장애 예술을 퍼포먼스의 입장에서만 보지말자
-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장르별 경중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예술전반에 대한 투여자본 투여 전문 인력 등은 비교적 균등하고 외부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됨. 중앙부처의 나눠 주 기식, 줄 세우기식,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사업들을 폐지시키고 군소단위정책개발, 사업들을 시행 토록 해야됨. 즉, 실적 평가 지표의 계량화를 막아야 됨

■문화예술정책의 민주적 운용을 알기 위한 체크 포인트와 기타 자유로운 의견을 주세요.

- ▶정책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입장반영
 - ▶지역에서 문화 활동 또는 발표자 위주 지원책 필요
 - ▶문화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이 필요
 - ▶정책수립 및 실행의 전문화 자율성확보
 - ▶현장에 있는 기획자들과 예술인들 그리고 각 문화재단 등 관계자를 모아 문화예술정책을 고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회의체 구성
 - ▶각 지역 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지역을 초월한 전국화 방안 사업 검토
 - ▶문화예술정책 자체가 공백이다. 그럼에도 예산은 쏟아지므로 전시 행정이 계속되는 것. 민주적 운용 이전에 국가 단위의 문화예술정책 확립이 시급함
 - ▶답변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전문집단의 고민이 더 요구되는 듯
 - ▶정부 예산을 타려는 줄서기가 없어지는 정책. 예술인복지재단 폐지. 문화예술이 사회에 기여 하는 예상치를 수치화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술가들이 당당하게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바랍니다.
 - ▶지원단체. 지원행사 공개. 심사 내용 및 평가지표 공개
 - ▶문광부의 사업공개, 공모사업 확대, 대단위 축제사업 축소. 등등..
 - ▶모니터링체계 확립, 수렴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마련
- 이른바 광화문문화사령부와 같은 직접민주감시기관에 대한 정치적, 입법적, 물질적 배려 요망.
- ▶1.문화예술예산증액 2.지원금정산제도개선 3.문화예술교육확충 4.예술인복지제도개선. 선발 과정 세부 공개, 사후평가 강화, 문화 신문고 제도(?)
 - ▶문화예술계의 기득권 층(교수, 대형단체)와 개인예술가, 소규모 단체의 경쟁을 없앤다.
 - ▶지방자치제도가 정치를 중심으로 20년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지역에 관한 정책 이 다분히 정치적이기 때문임. 지역문화진흥법을 움켜쥐고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조직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문화예술정책은 기본적으로 사고의 문제이다. 따라서 문화의 생산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운영자의 전문화가 필요시 된다.

- ▶큰 문화 단체에는 많은 지원이 가는것은 맞지만 작고 가난한 단체들에게는 정부차원에서 지원금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문화 활동만으로도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 되었으면 합니다
- ▶직접 지원을 피하고 환경(배경) 조성에 힘을 깃. 이 말을 실행할 정책가가 있다면 예술종사자의 시름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 ▶정부와 지역정부 내 불합리한 지원 예산 삭감---민간경상보조금 등과 같은 관변화 예산
- ▶예술인 성과 연금제 도입
- ▶예술인 직접정치 참여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인 참여 예산제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받아 실행)
- ▶문예회관을 살찌우는 지원 없애고 예술인들의 예술성과를 도우라.
- ▶문화전반의 구조개혁
- ▶정체성이 퇴색된 지역민예총(, 해당장르 단체 탈퇴한 예술인으로 민예총 비롯한 여타 장르단체들이 권력화 되면서 지원의존, 자생적능력을 상실하여 박제화된 상태이다. 시대정신도 상실하여 소시민의 의식에 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총은 물론 민예총이 패거리화 되면서 반성을 외면하는 행태는 문화예술정책의 민주적응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도 과하지 않다. 이러한 행태에 반발하여 이탈된 진보예술인들이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고 독립예술가 그들은 여전히 시대의식을 가지며 현장에서 생활예술, 마을문화, 콘텐츠개발 활동하며 어렵게 활동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의 역사를 왜곡하는 등... 이면의 고질적 병폐(적폐)조차 개관적 사고로 변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극복하고 앓고서는 민주적응용은 뜬구름에 불과하다.
- ▶정보공개, 과정과 결과공개 등등 투명성 확보
- ▶지역의 특성이 어떻게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본다
- ▶모든 국민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예술가가 예술로 먹고 사는 세상이 될 듯함
- ▶지역별 위원회 활성화와 민주적 운영방안 필요
- ▶블랙리스트관련뿐 아니라 성범죄 예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실제적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을 펼치는 기반 마련